

III. 최신 환경 단신

◎ 공장폐수 '자체처리후 방류' 허용 (서울경제신문, 98/09/01)

내년부터 폐수를 자체 오염방지시설에서 깨끗이 처리하는 업체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직접 방류해도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의 폐수 배출업소중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공공수역으로 방류,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을 거치면서 부담해온 배수로 설치비와 하수도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허가받은 해당업체가 방류 수질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할 때는 배출부과금 등 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 이밖에 환경부는 하수처리구역내 수세식 화장실 개조 의무조항을 권고조항으로 바꿔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상가 등의 부담을 줄이고 배수관의 오접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준공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 두만강개발 환경워크숍 '러'서 개막 (서울경제신문, 98/09/03)

두만강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보호대책을 논의하기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환경 워크숍이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남.북한을 비롯, 중국 러시아 몽골 등 TRADP 회원국 정부관계자들이 참석, 두만강의 수질오염 및 동.식물 보호 문제, 각국별로 차이가 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통일문제 등을 논의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멸종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시베리아 호랑이 서식실태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회의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외통부 당국자는 전했다.

◎ '매연없는 공장' 국내 첫 가동 (서울경제신문, 98/09/02)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 국내 처음으로 한 석유화학업체에 설치, 가동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SK(주)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부곡동 남사분해공장(NEP)에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140여억원을 들여 굴뚝을 통하지 않고 지상에서 폐가스를 완전연소시키는 폐가스 완전연소시설(Enclosed Ground Flare)을 설치, 시험가동중이다.

이 시설은 굴뚝 매연연소 전문 설비업체인 미국 존 징크사가 설치한 것으로

현재 미국 유화업체 등 전세계 환경선진 10여개 기업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이 시설은 공장안 폐가스를 배출하는 높이 112m의 배관식 굴뚝 아래쪽에 높이 30.5m, 지름 25m의 원통형 탱크안에 모두 160개의 버너 등 연소 장치를 설치,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폐가스를 이 곳에서 모아 불로 태워 완전 연소시키는 설비다.

이 회사는 종전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가스를 112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 설치된 연소기 1대로 태워 대기로 배출하면서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먼지 등이 함유된 유독성 검은매연을 다량 뿜었으나 이 설비의 가동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게 됐다.

특히 종전 굴뚝을 통한 연소과정에서 압력을 높일 때 발생하는 소음이 98, 99dB로 기준치 91dB을 훨씬 초과했으나 이 설비의 가동으로 소음측정치가 82 dB 이하로 떨어지는 등 소음공해도 크게 개선됐다.

회사 관계자는 『사실상 굴뚝이 필요없는 이 설비를 시험 가동한 결과 지난 6월 100%의 완전연소 효과를 봤으며 현재 기술전수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이 설비의 효과가 좋을 경우 다른 굴뚝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고컴퓨터 재활용협회 발족 (서울경제신문, 98/09/04)

고장났거나 사용하지 않는 286, 386급 PC를 수거, 고쳐서 보급하거나 환경오염없이 폐기 하는 등 중고컴퓨터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민간단체가 결성됐다. 컴퓨터 및 환경보호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회장 許仁會한겨레전자유통 대표)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유통상가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폐컴퓨터의 수집.수선.보급.폐기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목적을 둔 이 협회는 서울 노원.영등포구와 경기도 안성.일산.광명,부산, 대구 등 7곳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전국의 시.군.구에 1개지부를설치하는 등 활동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는 컴퓨터재활용 기술발전을 위해 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연간10만대의 폐컴퓨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컴퓨터 재활용 경진대회, 컴퓨터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을 열어 국민들의 재활용의식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폐기물 투기 벌금 1억원 (서울경제신문, 98/09/06)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할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종전 2,000만원에서 개인 1억원 이하, 법인 2억원 이하 등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소각로에 대한 규정도 강화돼 시간당 처리능력이 지정폐기물의 경우 25kg 미만, 폐가스 및 일반폐기물은 100kg미만인 소형소각로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현재 가동중인 소각로는 앞으로 5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위탁전 처리경로와 폐기물의 종류, 양, 성분 등에 대한 상세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하고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사이에 「폐기물처리 연간계약」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밖에 폐기물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 지방환경청에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산업폐수 완전분해 환경공정기술 국내 개발 (한국경제신문, 98/09/07)

독성이 높은 산업폐수를 종전보다 싼 비용으로 빠른 시간안에 완전 분해할 수 있는 환경공정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한국화학연구소 김영철박사팀이 선보인 이 기술은 "초임계수 산화 연속공정기술".

물이 액체와 기체상대로 공존할 수 없는 초임계상태(3백74C의온도와 2백18기압 이상)에서 폐수를 산화제와 혼합해 연속으로 처리하는 공정이다. 이 공정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상업화 초기 단계에 있고 기술이전조차 이뤄지지 않은 첨단 기술이다. 화학연구소는 이 공정을 이용해 폐수를 처리할 경우 외국에서도 도입해 쓰고 있는 액상소각법이나 습식산화법에 비해 비용을 25%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방식이 최대 85%정도의 유기물 분해 성능을 가지는데 비해 이 공정은 99.9%이상의 완전분해가 가능하다고.처리시간도 종전 방식보다 최대 1천분의 1정도로 짧아 소규모 시설로 대량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연구소는 이와함께 액상소각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다이옥신등의 대기오염 물질과 습식산화법에서 생기는 중금속 수질오염등 문제도 이방식

에서는 해결됐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수입에 들어왔던 연간 5백억원 이상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연구소측의 설명이다.

◎ 환경 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 정부서 직접 보조(연합통신, 98/09/08)

팔당댐 특별대책지역 등 환경 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제불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농업과 일반농법의 소득 차이를 면적 비례로 정부가 직접 보조해주는 제도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환경규제지역인 상수원 보호구역 1만9백84 농가 2만1천6백36ha, 팔당·대청댐 특별대책지역 3만6천2백66 농가 4만3천7백20ha, 자연공원지역 1만1백24 농가 4만3천6백63ha 등 모두 5만7천3백74 농가 7만9천19ha(논 3만6천6백3ha, 밭 4만2천4백16ha)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림부는 오는 11월 대상 영농단지 신청을 받아 내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농교육과 토양검사를 하고 영농지도와 관리를 한뒤 10-11월에 토양검사와 생산물검사를 거쳐 쌀 생산 기준으로 ha당 52만4천원씩 보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7억3천1백만원을 반영시켰으며 기존의 친환경농업농가를 위한 예산 40억8천2백만원을 반영시키기 위해 예산청과 협의중이다

◎ 내년 수도권서 무공해 CNG버스 35대 운행 (중앙일보, 98/09/08)

오는 15일부터 경기 안산지역에 무공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2대가 운행을 시작하고 내년중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CNG버스 35대가 운행된다.

8일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경기 안산 지역에서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하는 버스 2대가 보급돼 가스공사 직원 출근차량과 시내버스업체인 (주)경원여객 소속버스로 각각 활용된다. 또 내년에는 CNG버스 35대가 서울과 인천, 경기 일원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에 나선다. 이와 함께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고질적인 대기오염 해소차원에서 CNG차량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CNG차량의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CNG연료의 경우 경유의 60~75%에 불과한 저렴한 연료비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을 거의 유발하지 않으면서 휘발유와 거의 비슷한 효율을 갖고 있어 차세대차량 연료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스공사 관계

자는 "수도권의 주요도시에 CNG차량운행이 본격화될 경우 1조5천억~1조8천억원의 적은 예산으로도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CNG차량의 대량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소 1개소 설립에 5억원(부지대입비 제외)의 자금이 소요되는 등 CNG차량의 대중화에 아직도 상당한 걸림돌이 남아있다고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무조건 규제보다 재활용"..플라스틱포장재 환경개선 토론회
(한국경제신문, 98/09/09)

플라스틱 포장재사용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포장재질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등은 합성수지 포장재의 사용을 너무 일방적으로 제재해 산업포장 발전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한국포장학회가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주최한 "플라스틱 포장재 환경개선 공개 토론회"에서 박현진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등 학계 대표들은 한결같이 식품및 생활용품에 플라스틱 포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측에서 나온 산업자원부 정옥현과장은 "앞으로 정부는 PVC포장재 대체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이의 사용규제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는 플라스틱을 재생 재료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다이옥신 모유서도 검출 (한국경제신문, 98/09/11)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신동천교수 연구팀은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산모 10명의 모유를 분석한 결과, 모유 1g에서 평균 18pg(피코그램:1pg는 1조분의 1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신교수는 "모유에서 이처럼 유해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유아에게 그대로 전달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는 인체에 축적된 다이옥신의 양을 측정한 것일뿐 이 다이옥신이 유아에게 전달돼 유아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산모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불과해 그 유해성을 단정적으로 결론짓기에는 성급하다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지적했다.

◎ 한-일, 17.18일 기후변화협약총회 앞두고 비공식 각료회담
(한국경제신문, 98/09/13)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 의견 교환을 위한 비공식 각료회담이 오는 17,18일 이틀간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12일 밝혔다. 이번 각료회담에는 한국의 한덕수(한덕수)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20여개국의 통상.환경 담당 각료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료들은 오는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제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제한 의무분담, 배출권 거래제도 등의 현안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외통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11위(95년기준)인 만큼 선진국들로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서울 북동지역 오존주의보, 오존농도 사상최고
(서울경제신문, 98/09/12)

서울시는 12일 오후 3시를 기해 노원.도봉.강북.성북.성동.광진.동대문.중랑구 등 북동지역 8개구에 오존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오존농도는 방학동 측정소에서 0.154ppm으로 오존경보제가 시행된 지난 95년 7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번동측정소에서도 주의보 발령 기준치(0.12ppm)를 초과한 0.129ppm이 측정됐다.

시는 "최근들어 고온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대기중 오존오염이 크게 심화되고 있다"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생활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비상...선진국허용치 최고45배
(동아일보, 98/09/14)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전국 주요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선진국의 허용기준보다 최고 45배까지 많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각 생활쓰레기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전국 9개 소각장의 평균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0.92(1은 10억분의 1g)으로 선진국 허용기준인 0.1보다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경기 부천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선진국 허용기준의 45배나 되는 4.54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 성서, 경기 고양 안양, 부산 해운대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선진국 허용기준의 4~19배나 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후 시설이 낡아 보수공사를 할 수 없는 경기 의정부 소각장을 폐쇄했다. 또 서울 목동 상계, 부산 다대, 경남 창원 소각장은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한 뒤 평균배출농도를 0.03 미만으로 떨어뜨려 안전한 소각장으로 개선했다.

다이옥신은 지금까지 동물 실험을 통해 배출량이 많을수록 호르몬 분비체계를 교란시키고 간암과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위험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은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0.1 이상인 소각로를 엄격히 통제해왔다. 환경부는 2003년까지 9개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선진국 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소각시설로를 보수하거나 소각 공정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 상수원 주변 교량 유조차 통행 금지될 듯 (한국경제신문, 98/09/17)

팔당호 등 상수원 주변 교량과 도로에서는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조차 통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7일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정유회사 등과 함께 '팔당호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팔당호를 횡단하는 양수대교의 추석 임시개통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유조차가 팔당호로 추락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쌍용정유와 SK, 한화에너지 등 5개 정유회사에 대해 양수대교로의 유조차 진입을 제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또 농약·톨루엔 등 유독물이나 폐염산 등 지정폐기물 운반차량도 양수대교를 통과하지 않도록 엄격히 행정지도해줄 것을 허가관청인 한강환경 관리청과 경기도 등에 요청했다.

◎ 전국 공단 폐수처리장 42% 비정상 가동 (한국경제신문, 98/09/17)

전국 산업단지과 농공단지의 1백18개 폐수처리장 가운데 42%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그러나 식당·여관 등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취하는 것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형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효력 없는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어 대형 폐수처리장으로 인한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97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전국 1백18개 처리장의 41.5%인 49개소에서 1-4회 방류

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정상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수질정화제, 오히려 하천오염 가중...환경부 (한국경제신문, 98/09/17)

분뇨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투입하는 수질정화제가 기준치보다 최고 5백배에 달하는 중금속을 함유해 하천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여주군 환경사업소(분뇨처리장)에 수질정화제로 공급하는 서울 삼도화성의 염화제이철을 수거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구리성분이 기준치 3ppm의 5백배인 1천5백ppm까지 검출됐다.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에서 불량 정화제를 사용한 결과 처리효율이 떨어져 방류수배출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있으나 수질정화제 자체가 중금속에 과도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중금속 물질이 분뇨처리과정에서 하천으로 방류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해당 재생 수질정화제의 유통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했다.

◎ 폐금광 주변 지하수.토양오염 현황조사 (서울경제신문, 98/09/17)

폐금광 주변 농경지의 지하수와 토양에 대한 전문적인 오염현황조사가 곧 실시된다. 환경부는 17일 미국 무역진흥처(TDA)와 국내 일부 지역에 대한 '지하수.토양 오염조사와 복원 연구사업을 위한 지원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는 TDA를 대신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제리 미첼 참사관과 환경부 梁芳喆환경정책실장이 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국내 폐금광 지역에 대해 미국의 토양복원 전문업체가 약 14주간 오염현황을 조사한뒤 복원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비용 20만5천달러를 TDA가 무상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사사업에는 국립환경연구원이 공동 참여한다.

한편 합의서에는 오염도 조사결과 폐금광 주변 마을과 농경지의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복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정책판단이 내려질 경우 "동일조건이라면 미국의 전문업체에 참여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80년에 이미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의한 오염토양 복원을 위해 이른바 슈퍼펀드법으로 불리는 '포괄적인 환경대응.보상및 책임법'을 제정해 석유.화학업체 등에 복원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 '폐기물 감량화정책' 겹돌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98/09/20)

지난해 도입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형식적인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당초 목적을 거두지 못한 채 겹돌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는 현재 섬유·철강·화학 등 14개 업종 556개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연간 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국내 대기업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량화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단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단체는 사업장에서 수립, 추진한 감량화 계획 및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해서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포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초기부터 복잡한 절차와 기술개발 미흡, 인센티브제 미비 등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당초의 목적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선 사업장은 매년 2월말까지 감량계획과 추진실적 보고서를 사업자단체와 지방환경청에 두번씩 중복제출해야 하는데다 제출서류도 복잡하고 많기때문에 사업장의 인력을 감안할 때 내실있는 보고서 보다 형식적인 제출용보고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환경부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행해진 폐기물감축 우수사례를 취합해서 다른 사업장에 전파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우수사례로 전파한 경우가 단한건도 없다. 아울러 실질적인 폐기물감량화를 위해 사업장에 청정생산 기술을 보급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지만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올해 예산에 감량화 기술개발지원에는 한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환경관리인 고용의무제가 폐지되고 환경인력을 줄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때 사업장이 감량화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우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나 시설자금우선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애매한 규정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 산학협동에 의한 에너지절약 개발기술 잇따라 개발

(내외경제신문, 98/09/19)

산학협동에 의한 에너지절약 개발기술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에너지절약 우수연구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한양대 전자재료 및 부품연구센터의 「초음파 스케일방지기 개발」과 계명대의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연구센터의 「배

기가스 저감을 위한 내연기관용 산소과급 장치」 등이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은 지방대학의 연구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중점 육성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 및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지난 95년부터 시행됐다.

◎ 임진강유역 신규공해공장 설립 제한 (매일경제신문, 98/09/19)

환경부는 팔당특별대책권역 이외에 동두천시와 양주 포천 연천 철원군 등 5개 시·군 33개 읍·면·동 일대 1271.9km²를 임진강 특별대책권역으로 지정해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신규 공해공장입지를 강력히 제한해 나갈 방침이다. 양방철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동두천시와 양주군 등 경기북부지역 40여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산업단지내 신규공장은 허가해줄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이전조건부 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 237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2000년 6월말 이후 강제 폐쇄하겠다"고 밝히고 "공장확장으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면 신설로 보고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실장은 "임진강 특별대책권역을 지정하려는 것은 입지규제가 주목적이나 수질이 계속 악화될 경우 기존 공해업소의 오염배출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특별대책권역은 * 동두천시는 생연동 등 8개동(96km²) * 양주군은 회천읍 등 6개읍·면(185km²) * 포천군은 소흘읍 등 12개읍·면(743.2km²) * 연천군은 연천읍 등 5개읍·면(136.5km²) * 강원도 철원군은 갈마읍 등 2개읍(111.2km²)등이다.

◎ 콩, 환경호르몬 함유로 신생아에겐 안좋은 수도 (한국경제신문,98/09/22)

콩의 주성분으로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니스타인'이 환경호르몬 물질이라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콩은 그 자체가 식용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두부, 두유 등 가공품으로 널리섭취되는 식품이어서 이 연구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국립의약품 식품위생연구소 객원연구원 강경선박사(서울대 수의대 공중보건학교실 연구원 겸임)는 22일 「'제니스타인'과 '비스페놀 A'의 여성호르몬 효과」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박사의 이 논문은 지난 8월 한국식

품위생안전성학회지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에스트로젠(여성호르몬) 수용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의 유방암세포주에 '제니스타인' 1백만분의 1mol(1mol은 물 1ℓ당 1g이 함유된 양)을 혼합해 3일간 반응시킨 결과, 유방암세포의 성장률(세포수 증가)이 40%로 아무것도 반응시키지 않을 때의 세포성장률 10%의 4배에 달했다. '제니스타인' 1억분의 1mol, 1천만분의 1mol을 반응시킨 결과에서도 유방암 세포주의 성장률이 20%, 35%였으며 1백만분의 1mol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10만분의 1mol에서는 30%로 감소했고 '제니스타인' 용량을 늘릴수록 세포 성장률이 감소했다. 강박사는 또한 '제니스타인' 1만분의 1mol이상을 반응시킨 결과에서는 유방암세포주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고 오히려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로 추정해볼때 '제니스타인'은 고농도에서는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1억분의 1~십만분의 1mol에서는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등 용량에 따라 생체내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박사는 설명했다. 강박사는 이에 따라 콩의 '제니스타인' 성분이 인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독성연구소 박귀례과장(생식독성과)은 "일본 의약품 식품위생연구소도 '제니스타인'을 환경호르몬 물질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생체의 실험에 불과하며 정자수 감소, 생리불순등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박과장은 "그러나 콩의 '제니스타인'이 면역체계가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신생아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환경성적 표시제 2000년부터 도입키로 ..당정 (한국경제신문, 98/09/21)

정부와 여당은 21일 특정 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품 표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환경성적 표시제"를 오는 2000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최근 산업자원부 및 환경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성적 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환경기술개발 촉진법"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등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중 특정 상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 이상은씨 선임 (한국경제신문, 98/09/22)

환경부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에 이상은 건설기술연구원 기술관리센

터소장이 선임됐다. 신입 이원장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 강사, 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감사원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 환경부, 팔당호 준설 검토 (서울경제신문, 98/09/22)

최근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수도권 2,000만명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준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22일 국립환경연구원이 사당동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개최한 「팔당호 준설 타당성 검토」 공청회에서 『내년에 팔당호 준설과 관련한 현지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팔당호내 퇴적량과 퇴적된 오염물질의 오염 부하량, 준설시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 준설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팔당호 준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한국종합기술개발 유기춘 부사장은 『과거에는 하상 정비와 골재채취를 위해 준설했으나 최근에는 환경개선을 위해 준설한다』면서 『팔당호도 적합한 공법을 도입하면 2차 오염 없이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팔당호 준설문제는 지난 90년 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팔당호 상수원보호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결과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서는 팔당호 오염퇴적물 준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롯됐다.